

11년 만에 부활 '천안함'... 생존 용사들 진수식 '불참'

유튜브 '잠수함 충돌설' 음모론
방심위 '문제없다' 결정에 반발
함장·장병들 '의미 퇴색' 보이콧

북한에 의해 침몰된 천안함이 11년 만에 강력한 신행 호위함으로 부활했지만, 진수식에 주인공으로 서야 할 천안함 생존 용사들은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천안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이 열리지만,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함명은 진수식 때 일반에 공개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천안함 함명을 언급하면서 먼저 공개했다. 천안함 생존 용사들은 진영 간의 정치싸움으로 얼룩진 '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진여 성향의 '천안함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장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유튜브 수사결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

천안함 용사들이 진수식에 불참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합외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때문이다. 방심위 위원 9명은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다. 최근 이들 위원들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진상위)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피격인

지 좌초에 의한 것임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재조사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이 됐고, 결국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방심위 심의에 오른 콘텐츠 중에는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올린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군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한 침몰이라고 밝혔음에도 유튜브에는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다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故) 한주호 준위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 등의 사실무근의 내용들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방심위와 군사망진상위뿐 아니라 경찰도 천안함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 "병X 같은 새

X" "폐잔병" 등으로 비난한 정모씨를 지난달 29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가설과 논쟁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최원일 전 함장(대령 전역)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소행이었는데 아들(방심위)은 어느 나라 기구나"면서 "진수식 참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준영 생존자 전우회장은 "천안함 갖고 '쇼'하고 챙겨주는 척하지 말고 관심을 끊어달라"며 진수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용사들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와중에도 해군은 경항모 영상 공개를 통해 창설 76주년 홍보에만 힘을 쓰는 모습만 보여 확인한 대조를 이뤘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민간 보유 요소 3천t 발견... 요소수 제조 투입

정부, 요소수 유통·수입 점검
차량용 요소 700t 금주 공급
나머지 분량도 전환 즉시 공급

요소수 수급 점검에 나선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에서 보유 중인 요소 3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인데 이중 차량용 요소 700t을 국내 생산업체로 이송해 이번 주 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매일 점검 중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을 발견했다. 차량용 요소 2000t(약 600만 l) 중 700t은 수입업체와 협의해 10일 국내 생산업체로 이송하고, 금주 중 요소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량

도 요소수 전환이 완료되는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합동 단속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 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합동반은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을 단속 중이다. 합동 단속반은 사재기 등 매점 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 수준의 요소수 수입 물량을 신속히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

로 바뀌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 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내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t을 활용하는 방안도 조속히 협의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차, 구급차 등 요소수 재고 현황을 다시 점검한 결과 "재고분이 확보돼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문 대통령, 12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화상 형태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8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가속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주요국 정상들은 올해 정상회의에서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20년의 APEC 협력 방향을 제시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 원조 등 한국 정부의 기여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에 대한 경제 회복 지원 중



문재인 대통령. /뉴스

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이 담은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포용적 경제 회복' 선도 사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초청으로 'CEO 서밋 에너지 미래 세션'에 참석, 기조연설도 갖는다. 이번 세션은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계기에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화장품 4곳 중 1곳 "판매목표 강요 당해"

공정위, 1만1120곳 거래 실태조사
"표준 계약서 만들어 불공정 차단"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꼴로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6개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공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153개 공급업자,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특히 화장품 업계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은 66.3~89.6%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장품 23.4%)를,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불공정 행위가 가능성도 드러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3%로 활성화됨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활용품 대리점은 판매목표 강제(14.8%), 미달성시 불이익(56.3%)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 6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간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외식 할인' 지원 종료... 155억 환급

오늘 종료... 일주일 만에 예산 소진

이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재개된 외식할인 사업이 1주일여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일 재개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1월10일자로 종료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1~7일까지 1주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565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

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09억원으로, 11월10일경 배정예산 155억원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0일 자정까지 주·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사업은 지역화폐(76개소)를 통해 추진된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 총 25억원 소진 시 최종 종료된다. /세종=한용수 기자